

대학교육과

글로벌 경쟁력

부구욱 | 영산대학교 총장

우리 정부는 50여 년 전부터 수도권 과밀 억제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1964년 '특정지역 지정'을 통한 수도권 과밀억제, 1970년 '수도권 인구의 과밀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 1984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억제, 그리고 최근의 세종시로 대표되는 지역균형발전 등이 그것이다. 수도권 과밀화가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대화는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 비대화는 교육 분야에서도 궤를 같이 해왔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총 입학정원 35만 명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정원은 12만 명 정도인데, 이는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34%가 몰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과부는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최근에는 지방화시대라는 큰 틀 속에서 다각적으로 지방대학 발전을 모색하면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역부족이었다고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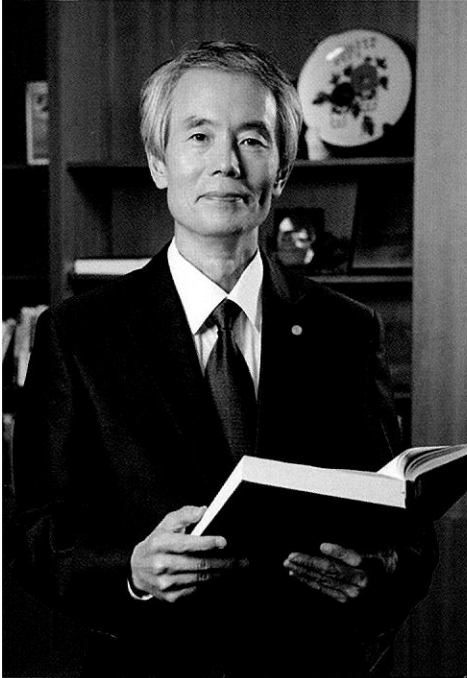
21세기 지식산업시대에는 고등교육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국토 면적도 작고 자원도 부족한 우리는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급인재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대학은 우수한 자원 및 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여 주로 고등 교육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을 것이고, 지역대학은 주로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특화하는 분야 등에서 비교 우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 우위를 살리는 다양한 교육정책이 국가 전체로 볼 때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도권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수 교원 확보 및 시설확충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OECD 가입국가의 고등교육재정비율 평균은 1%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최하위 수준인 0.6%에 불과하다. 이처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미국이나 서유럽처럼 교육에 대한 사회의 기부문화가 성숙한 나라도 아니다. 이런 실정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수도권 대학, 특히 수도권의 사립대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학생 수 확대, 등록금 인상 등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미국의 하버드대학 등처럼 '소수 정예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보다는 규모 확대를 위하여 '소수 정예화'를 희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자연히 지방 학생의 수도권 흡수로 이어지고, 국가 전체로는 인적자원의 다방면에 걸친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수도권대학은 고급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지방대학은 지역발전에 특화하여 지역에 뿌리 내리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 본다. 이러한 교육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는 지역대학에 대한 안배는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수도권 대학의 고급화를 위한 정원 감축이나 '정원 외 모집' 축소방안 등은 앞으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모든 대학들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과 고등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전제로 논의한다면 상생의 합의 도출이 어렵지만은 않다고 본다.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각 대학들은 입학정원의 10% 가량을 '정원 외 모집'을 통해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정원 외 모집'은 사회적 배려 계층과 교육 소외지역 출신 학생에게 성적보다



는 자질과 인성을 고려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는 것이며, 대학들은 성적 중심의 입시에서 탈피하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정원 외 모집'이 교육 소외지역 출신 배려라는 본래 목적 달성 보다는 지방학생들의 수도권 진입 확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전국의 4년제 대학 '정원 외 모집' 인원의 43% 나 되는 1만 5,000명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다. 이 수치는 수도권 대학이 총 입학정원에서 차지하는 34% 보다 9%나 높은 비율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소재 4년제 대학 총 입학생 1만 4,624명(2010년) 보다 더 많은 학생이 '정원 외' 형태로 수도권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정원 외 모집' 정책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반값기숙사 문제도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 낮은 이유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등록금은 비싸더라도 민간의 기부금이 많아 저소득층은 장학금을 받거나 낮은 등록금을 내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민간의 기부도 부족하고,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사립대학에 정부지원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사립대 학생도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도 말이다.

교육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공공성을 띠며, 더 나아가 21세기 글로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고등교육기관은 국가 간의 생존경쟁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미래 사회에서는 글로벌 국력경쟁에서 국방부만큼 대학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는 시급하다고 본다. 즉,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부, 사회 전반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등록금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반값등록금 추진보다는 지방대학의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등록금의

절대수준을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반값기숙사 문제로 마친가이다. 많은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이들의 수도권 주거 및 생활비용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과밀화된 수도권의 고비용 여건상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반값기숙사 정책은 서울로 올라가는 지방학생이 대상이며, 지방을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 반값기숙사 혜택을 준다고 하여도 서울의 높은 생활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소득이 더 낮은 계층의 학생들은 지방대학으로 진학한다. 실제로 뉴스에 발표된 월 19만 원의 서울의 연합기숙사 비용보다 더 낮은 지방대학의 기숙사 비용조차 저소득층 학생들은 힘겨워한다. 그래서 지방대학은 출혈을 감수하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저소득 지방학생을 위한 지방기숙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정부의 정책결정 시 세밀하고 조심스런 접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에 반값기숙사를 지어 지방학생의 생활비를 돕는다는 선의의 정책이 오히려 소득이 더 낮은 지방학생을 역차별하고, 결과적으로 총체적인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우리 고등교육이 후대에도 지속되게 할 의무를 우리 교육자들은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의 역할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부와 대학사회가 함께 고민함으로써, 수도권 진입을 향한 과도한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부구육 총장은 경기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서울지방법원 부장 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1년부터 영산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 후원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로스쿨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조정학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한국대학총장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會社支配權讓渡에 관한 美國法小考**』, 『**約束어음 公正證書에 관한 諸問題. 裁判資料 31輯**』 등 다수가 있다.
